

폐가전 전용 집하장 구축으로 수거 서비스 강화

전주시, 삼천동에 폐가전 전용 집하장 이전 완료…2월 2일부터 본격 운영 개시해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폐가전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폐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팔역마립장에 위치한 폐가전 집하장을 삼천동 3가 889-8번지 일원(1371㎡)으로 이전 조성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폐가전 집하장은 그동안 매립장 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이유로 급증하는 폐가전 수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신고 후 수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시간 등 제한이 없는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인근 부지를 확보해 집하장을 이전하게 됐다.

새로운 집하장이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평균 30일 가량 소요되던 폐가전 수거 주기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주당 약 80건에 불과했던 수거량도 300건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나 폐가전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의 대형가전과 5개 이상 끓음인 정수기·선풍기 등 중·소형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용 사이트에 '배출 예약' 메뉴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지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 대상 품목이 확대(50개→전품목)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해 '중·소형 폐가전과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 수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신승민 기자

20여년 난제 일명 송정리 1003번지 시민 품으로

광산구 광주송정역 맞은편 폐 유통가 정비 해결책 마련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호남 관문 다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광장 확장 사업에 이어 오랜 난제로 방치된 역 맞은편 폐 유통가 일대(일명 송정리 1003번지)를 시민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색 있는 공간 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광주송정역 일대를 광주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로운 공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송정역 폐 유통가 정비 사업'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공공 주도로 해결하는 선제적 대응책이다.

광주송정역 건너편 유통시설 밀집 지

역은 오래전부터 안전·미관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 첫인상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돼 도시재생사업 등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상가 소유주 참여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슬럼화된 상태로 방치됐다.

광산구는 총 66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방치된 시설,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 취약 요소를 제거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2 단계에서는 총면적 900㎡ 35면의 주차장, 총면적 585㎡의 쌍지 쉼터를 조성해 문화·향유·상권 협력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 협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폐 유통가 정비 사업'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공공 주도로 해결하는 선제적 대응책이다.

광주송정역 건너편 유통시설 밀집 지

역은 오래전부터 안전·미관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 첫인상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돼 도시재생사업 등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상가 소유주 참여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슬럼화된 상태로 방치됐다.

광산구는 총 66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방치된 시설,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 취약 요소를 제거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2 단계에서는 총면적 900㎡ 35면의 주차장, 총면적 585㎡의 쌍지 쉼터를 조성해 문화·향유·상권 협력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 협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폐 유통가 정비 사업'

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공공 주도로 해결하는 선제적 대응책이다.

광주송정역 건너편 유통시설 밀집 지

역은 오래전부터 안전·미관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 첫인상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돼 도시재생사업 등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상가 소유주 참여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슬럼화된 상태로 방치됐다.

광주송정역 건너편 유통시설 밀집 지

3개월 만에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탄력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답 팀 신설,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결성 등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무주군은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마무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군비) 184억 원

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노장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무주군 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준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이번 협의는 전국 군 단위 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

김서주 기자

국가산단 유치, RE100 반도체 자문단 위촉



순천시가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8명을 위촉하고, 육성 전략 고도화 및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 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산업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시각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자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

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준이 기후생태연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운 순천대학교 교수, 천영준 비즈엔터프라이즈 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회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자문·▲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무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노관규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포럼 공동 개최

고흥군-사천시,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담하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사천시와 함께 3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지 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담 이 있다)'을 공동 개최했다.

또한 종합토론회에서는 명노신 교수(경상국립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이상섭 본부장(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태현 회장(KAI 협력사업협의회), 최성임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용규 교수(순천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 원장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신상준 KAI 상무의 「산업 생태계와 K-우주항공의 미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종합토론회에서는 명노신 교수(경상국립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이상섭 본부장(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태현 회장(KAI 협력사업협의회), 최성임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용규 교수(순천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흥과 사천이 협력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공론화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해 인구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흥군은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우주발사체 국기산업단지 조기 조성, 민간 연소시 험시설, 민간 전용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이 2027년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7년 전남체전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돋입했다.

고흥에서 전남체전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9년 만이다.

설레미에서는 전남체전 기본구상과 추진 상황, 부서별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며, 이번 체전이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체육·산업·문화가 융합된 전남체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부서 간 협업을 다짐했다.

아울러 고흥군은 우주·드론·스마트 팜의 3대 미래 전략산업 등 고흥의 강점을 전남체전과 연계해 '우주항공 종합도시 고흥'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설레미를 시작으로 단계별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남체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덕현 기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국비 200억…진안군 신규조성형, 김제시 지구지정형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신규조성형)과 김제시(지구지정형)가 동시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조성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은 마령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 분양형 스마트팜 단지 등을 접속 조성하며, 핵심 시설 구축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지구지정형으로 선정된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내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지정받는다.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이 부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스마트 APC 및 가공센터를 포함한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제도적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도로·하천 점용 등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일괄 의제로 처리돼 행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특례가 적용돼 수의계약을 통한 장기 임대(10년+10년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해

져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 기반도 강화된다. 도는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청년농 창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이 접속된 클러스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

경제 영토 확장 가속도…제3산단 확장 전격착수

전북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며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이 착공에 돌입했다.

착공은 행정적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익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약 27만㎡ 규모의 산업 용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프로젝트다.